

제20대 국회의원선거 7대 정책

【정당명 : 민주당】

정책 순위: 1	저비용사회
내 용	<p>□ 제안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박근혜 정부를 비롯 여야 모두, 주거문제 해결에 소극적 ▪ 저금리 시대 고착으로 자본가들이 월세시장에 몰리고 있으면서 민주거환경을 더욱 어렵게 하고 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14년 기준 신고한 임대사업자들의 상가임대소득만 56조원(주택임대 제외) ▪ ‘100세 시대’, ‘삼포세대’ 그리고 ‘1인 가구’ 확대라는 전사회적 문제에 대한 실질적 대안 전무 <p>□ 세부정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부·지자체가 주도한 가격폭등 품목의 원상복구 및 가격 대폭 인하를 추진 ▪ 공공요금인하 등을 통해 국민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가처분 소득 증가를 유도하는 전사회적 저비용사회시스템을 구축 ▪ 국민 가처분 소득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는 주거비, 교육비를 획기적으로 낮춤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의 현실화 - 생활인프라를 갖춘 자족도시와 새로운 형태의 임대주택공급 / 주거 월세 반값정책 ▪ 공공요금, 세수확보를 위한 무차별적 간접세 인상,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유발되는 고비용 사회구조를 타파(이스라엘은 국민의 통신비를 1/3로 낮추바 있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공요금/ 통신요금 / 담뱃값 인하 / 의료 및 국민연금 개혁 / 대학등록금혁신 - 고용자와 피고용자간 상생공유임금정책 개발

<p>정책 순위: 2</p>	<p>저비용상생정치개혁</p>
<p>내 용</p>	<p>□ 제안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국회의원은 법률상 연봉이 무려 1억 7천만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9명의 보좌진(연봉 합계 약 4억원) 모두를 합한 의원 유지비는 연간 약 6억원 / 4년간 국회의원 300명에게 지급되는 비용은 약 7천여억원 ▪ 국회의원 연봉(2012년 기준)은 스페인, 포르투갈, 덴마크 등의 약 3배 수준, 10년간 한국 연봉 상승률은 51% (미국 20%, 영국 27%) ▪ 그러나 제19대 국회에서 순수하게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 (철회, 단순폐기 제외)의 경우, 대표 발의 통과율이 30.45%, 공동 발의의 경우 32.32%, 의원발의 법률안의 통과율은 32.28% ▪ 국회의원 본연의 임무인 입법 활동을 등한이 하여 직무유기를 한 것이며 국민의 세금을 허투루 사용한 것임 <p>□ 세부정책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국회의원의 세비를 중산층 수준으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재 국회의원 보좌관(인턴포함 최대 11명) 정수를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궁극적으로 보좌관 제도를 없앨 것 ▪ 국회, 시민단체 그리고 학계로 구성된 「국회의원권한조정 위원회(가칭)」를 구성하고 국회의원 특권 축소를 당정책으로 제안 ▪ 재보선 2위 승계제 도입(예산절감,지역주의완화) / 국회의석 여야교차제(지역구별또는 상임위별배치) ▪ 국회의원연금법 현실화를 위해 연금은 의원으로 봉사한 횟수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연금법 일부조정 ▪ 연정을 통한 국난 극복

<p>정책 순위: 3</p>	<p>새만금 신경제수도</p>
<p>내 용</p>	<p>□ 제안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창조적이고 새로운 성장전략 필요한 때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전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음 ▪ 경제자유와 공공주거·공공보육의 사회적 공동체를 동시에 실현해, 대한민국의 미래세대에게 주거 및 자녀양육부담에서 해방된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이 새만금 신경제수도의 목표. ▪ 민주당은 새만금을 저성장시대를 돌파할 새로운 성장기지이자 신경제수도, 대한민국의 실리콘벨리, 대한민국안의 싱가포르로 만들 것을 제안하고 향후 일관되게 추진할 것임. <p>□ 새만금 신경제수도건설 기초</p> <p>1. 새만금 신경제수도건설의 3대원칙</p> <p>1) 강력한 추진주체 창설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현 국무총리 소속 ‘새만금위원회’를 대통령 직속 ‘새만금 신경제수도 건설위원회’로 격상 / 대통령실 ‘새만금전담 수석비서관’ 신설 / 전라북도 소속의 ‘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’ 설치 <p>2) ‘경제규제 제로(free), 주거부담 제로(free)’ 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최소한의 규제 외에 모든 것을 풀고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와 혁신의 기회를 제공 / 전면적 무상주거, 무상보육, 무상교육을 제공하여 미래세대를 위한 새로운 공동체문명 도시를 만들어야 함 <p>3) 이익공유: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새만금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이익은 군산, 부안, 김제 등 전북뿐 아니라 대한민국 전 지역에서 공유할 수 있는 공공재

	<p>2. 신경제수도는 대한민국과 호남경제의 새로운 융성을 위한 위대한 도전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신경제수도는 한중일 경제협력시대의 중심이 되고. 새만금-세종시-포항을 잇는 신중원벨트의 주춧돌 <p>3. 새만금 신경제수도 기획단 구성 및 새만금 신경제수도건설 범국민추진본부 (약칭: 경제수도 추진본부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시민사회 협력과 정당정파를 뛰어넘는 범국민추진본부 또는 새만금신경제수도기획단을 구성, 구체적 정책을 당의 핵심공약으로 제시 <p>□ 새만금 신경제수도건설의 행정추진시스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국무총리 소속 「새만금위원회」를 대통령 소속 「새만금 신경제수도 조성위원회」로 격상 2. 대통령실에 ‘새만금 신경제수도 전담 수석비서관’ 신설 3. 새만금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로 정책자율성 제고와 자치입법권 부여 <p>□ 새만금 신경제수도건설의 재정추진시스템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‘새만금 특별회계’ 설치 실현 및 재원(수입금)조달 규정 강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새만금 특별회계 설치 근거를 강행규정화하고, 「새만금 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」 (이하, ‘새만금특별법’이라 함) 제38조 세입 규정 중 국가로부터의 수입금액을 법정률 (예, 내국세 총액의 2% 등)로 정함 2. 새만금 내 ‘토지 공개념’ 도입으로 공공주거, 공공보육 기반실현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토지공유화를 바탕으로 새만금 내 토지를 전면 공유화하여 개인이나 기업에게 토지를 임대한 후, 토지 사용료(임대료) 징수 3. 종합적으로, 새만금 신경제수도 조성 재원은 국가 출연(예, 내국세 총액의 2% 등), 새만금 토지사용권 임대 수입, 새만금 토지임대수입 담보 ABS(자산유동화증권) 발행 등을 통해 조달.
--	--

<p>정책 순위: 4</p>	<p>인사선진화법</p>
<p>내 용</p>	<p>□ 제안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헌법 제 25조 ‘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무담임권을 가진다’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공무 담임권은 지역적 차별 능력없이 능력에 따라 최상위직까지 공무를 담임할 권리가 있음을 천명한 것 ▪ 박근혜 대통령은 요직인사 등용에 있어 호남지역 출신자를 과거보다 더한 차별과 홀대를 하고 있음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새정치민주연합이 발표한 『특정지역 편중인사 실태조사 보고서 (2015년 2월 현재)』에 따르면 영남 지역 출신의 인사 편중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- 국가 의전서열 순 10위 11명중 영남 8명이 차지하며 호남은 1명으로 이 또한 당연직(국회부의의장) <p>□ 주요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대한민국 국가 의전서열 상위(차관급 이상) 고위직은 출신지역을 배분하여 임명할 수 있도록 「고위직지역균등인사법」 발의

<p>정책 순위: 5</p>	<p>65년 한일협정 재협상 추진과 '15년 한일 '위안부'협상 무효화</p>
<p>내 용</p>	<p>□ 제안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1965년 한일협정에서 틀어진 청구권 문제는 박근혜 정부의 2015년 한일 '위안부' 협상 함으로 더욱 심각하게 틀어짐 ▪ 일본군 '위안부' 문제는 한반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수많은 여성들을 강제로 끌고가 '성노예'를 강요한 것으로 이는 국가주도로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 범죄 ▪ 민주당은 피해자들과 국민의 납득이 없는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못한 2015년 한일 '위안부' 협상에 반대하며 문제의 근원인 1965년 한일협정 협상의 전모를 밝힐 필요가 있음 <p>□ 주요내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국회 차원에서 가능한 '1965년 한일협정'에 대한 중재와 재협상을 추진하며 이를 위해 청구권협정과 관련된 양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서를 전면 공개 ▪ 2015년 한일 '위안부' 협상의 전모를 밝힐 수 있도록 이에 대한 진상 조사를 위한 국정감사 요청 ▪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 재단과 협의체를 구성하여 사할린 억류 피해자, 원자폭탄 피해자,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의 청구권과 공탁금 문제에 대해 실질적으로 보상하는 조치를 강구 ▪ 일본군 '위안부' 문제를 국제적으로 연대하며 이를 기억할 수 있는 '위안부 평화공원'을 조성 ▪ 일본군 '위안부' 문제와 같이 일본의 법적 책임이 있는 사안에 대해 일본정부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와 청구권 배상을 요청해 우리 국민의 존엄과 기본권 회복 <p>□ 위안부평화공원재원조달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현 중복 추진되고 있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 중 일부와 국민 성금으로 조성

<p>정책 순위: 6</p>	<p>한반도 신평화체제 구축</p>
<p>내 용</p>	<div data-bbox="395 412 568 448">□ 제안이유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김대중 정부와 노무현 정부를 이어온 햇볕정책은 남북한 적대적 인식을 완화 시키고 협력을 증대시켰다는 긍정적인 효과는 있으나, 북핵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되려 심화시켰다는 한계를 가짐 <div data-bbox="395 795 568 831">□ 주요내용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한반도 신평화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강력한 안보와 남북한 대화와 협력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를 꾀하고 북한과 화해와 평화를 구축하는 대북정책 - 지난 햇볕정책의 계승하지만 한계를 보정한 대북정책 <div data-bbox="395 1176 568 1211">□ 세부정책</div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북한의 핵모라토리엄과 한미 합동군사훈련의 원샷협상 추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북핵 모라토리엄과 군사연습 중단을 협상안으로 제안 → 북·미 수교→평화협정 과정을 통해 북핵실험과 제재의 악순환을 끊고 신뢰가 충분히 쌓인 후 CVID(완전하고 검증 가능하고 불가역적 비핵화)를 논의 - 우리 한·미 연합군사력은 충분한 대북 억지력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북한이 모라토리엄을 위반했을 경우 언제든지 군사연습 재개

■ **우리군의 한반도 방공체계 통제권 강화를 위한 법안 발의**

- 북핵은 한반도에 위협이 되지만 북한과의 분쟁 발생시 초도 위협은 북한의 장서정포
- 장서정포의 사거리는 60km. 개성공단과 서울 도심이 직선거리로 50여km에 불과해 수도권이 장서정포의 사정권이나 이에 대한 대책은 미비함
- 박근혜 정부의 사드 배치 논의는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안보 경쟁을 촉발 시키는 촉매제가 될 수 있으며 남북한 대치 상황에서 사드의 전략적 그리고 전술적 실효성은 아직 불확실할 뿐만 아니라 우리 국민의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검증이 필요한 사항
- 이에 대한 대비로 우리군이 KAMD를 준비해온 만큼 본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 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추진단 구성

■ **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폐쇄에 따른 피해자보상 특별법 발의**

- DMZ 세계평화공원 조성계획과 유라시아이니셔티브 구상 실현을 위해서도 기존 사업 재계는 필수
-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중단에 따른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만큼 관련 대북협력 중심 지역에 대한 실태 조사와 경제 활성화 방안 도출하고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한 국회내 추진단 구성

<p>정책 순위: 7</p>	<p>당원중심정당정치 복원</p>
<p>내 용</p>	<p>□ 제안이유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정당의 중심주제는 당원! ▪ 당 지도부 선거가 당원중심에서 시민 및 모바일 중심으로 바뀌면서 정당정치의 적잖은 변화 <p>□ 방 안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▪ 전당원 투표제 ▪ 정당의 주인인 당원의 주권을 확고히 세우기 위하여 당의 정책결정이나 지도부 선출에 있어서 전당원의 투표를 실시하여 정당을 바로세우고 정당정치를 복원